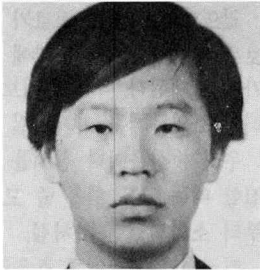


정보화사회에 따른 제도적 보장



裴 文 鏞
(대한주택공사)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회이다. 그럼, 정보화사회란 무엇인가? 정보화사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정보화사회는 사회학적으로는 인간이 잃었던 개성과 시간을 되찾아 사람다운 삶을 영위케 하고,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면서도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는 정보의 가치가 재화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정보자본주의 시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는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민문화(Civil Culture)와 컴퓨터문명이 서로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슬기롭게 융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의 주민등록전산화 계획에 따라 18세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는 개인신상자료 조사작업이 개인의 사생활권 침해라는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것은 과연 국가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서 정부가 민주국가의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자

유와 권리를 속박하고 침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문제를 간과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주민등록 전산화계획 같은 정보의 수집·가공·전달·이용하는 전과정은 국민이 그 대상 또는 주체라면 반드시 국민의 합의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민의 합의 또는 공감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정보를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정보에 관한 모든 일들을 추진할 경우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를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한 정보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권력과 부의 편재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기술을 고도로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행정업무의 정보화와 동시에 「정보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정보민주주의라 함은 정보에 관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초하는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의 많은 업무가 전산화, 정보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개인은 자기 정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신앙 등에 관한 정보는 수집 및 수록을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보공해에 시달리지 않고 정보화사회로 가는 길목에서의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 개성화 문제에 부응하리라 본다.

**정보화사회는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민문화(Civil Culture)와 컴퓨터문명이
서로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슬기롭게 융합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